

주간 통일정세

2014-4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민화협 "남 '인권결의' 기담...극악한 정치도발"(11/24,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인권결의 조작놀음에 적극 기담해 나선 괴뢰패당의 행위를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정치적 도발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규탄·단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며 "그러나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 인간쓰레기(탈북자 지칭)들의 뼈라 살포 망동에 대한 비호·조장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함.
 - 민화협은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남한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국방위 성명에 주민 동원 '강경대응' 분위기(11/24,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4일 '인권 모략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통과를 환영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뿐"이라고 위협함.
 - 조선중앙방송도 24일 정철 국가가격위 부원이 "미친놈들이 감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까지 거론했다는데 이 결의를 조작한 주범들과 그에 가담한 자들을 어찌 이 지구 상에서 숨을 수 있게 놔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대가 치를 것”(11/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논평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4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에 편승한 현 남조선 정권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 역대 최악"이라고 공격함.
 - 통신은 이어 남한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 동참했다며 "괴뢰 패당의 인권 소동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합세해 신성한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압살하려는 동족대결의 최극한점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이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함.
 - 통신은 "괴뢰 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별없이 미쳐 날뛰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남북러 협력 논의(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7일 방한했다고 전함.
 - 갈루슈카 장관은 28일까지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남·북·러 협력사업 등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 탄력...시범수송 석탄 포항 도착(11/29, 연합뉴스)
 -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화물선이 29일 오전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배에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된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이 실려 있으며, 석탄대금과 운송비를 합친 사업 규모는 400만 달러가량이라고 뉴스는 전함.
 - 화물선은 일단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내달 1일 오전 포스코 전용부두인 포항항에 입항해 유연탄을 하역할 예정이며, 하역작업은 3~4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유연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옮겨져 고로에 들어가는 코크스 원료로 사용된다고 뉴스는 전함.
 - 포스코 측은 유연탄이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공급 여부와 유연탄의 질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개성 영통사서 남북 합동법회 봉행(11/2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보도를 통해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26일 낙성 9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스님 913주기 열반다례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다고 전함.
 - 연설에서는 "북남 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복원해놓은 영통사는 지금 통일 도장으로서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가고 6·15 시대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용납 못할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소개함.

- 남북고위급접촉 등 현 남북관계 관련, '남조선 당국은 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현 사태 앞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동을 성근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발언과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11.24, 중앙통신·노동신문)
- '호국훈련' 진행 등 관련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은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노골적인 책동'이라며 '만일 괴뢰들이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제가지른 불에 영영 타죽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11.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對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돌파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것 관련 '미국을 위시로 한 적대세력들은 국제무대에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11.24, 중앙통신)
- '南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 데 대한 북남합의의 난폭한 위반'이라며 '南 당국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진정이라면 채택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습성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11.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北 핵실험에 대비해 대비태세 강화)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며 북침핵전쟁도발로 확대하려는 괴뢰호전광들의 범죄적 계책'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제동(北 인민경제대학 교수), 韓美 「전작권」 再연기 합의 관련 '보수패당은 미군의 남한 주둔을 반통일 세력의 집권에 유리하게 이용해왔다'고 주장(11.26, 중앙통신)
- '오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곳은 남조선'이라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 거론 '군졸들을 침략야망실현의 도구로, 대포밥으로 여기고 개 취급하는 軍 상층부와 비호두둔하는 역적패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반인권적인 폭력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비난(11.30,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은 인권 정치화...위험한 전례"(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통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돌파적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국제무대에서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불순세력들의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목인된다면 정치적 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조선신보 "최룡해 방러, 대미 억제 위한 북·러공조"(11/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동북아 질서 재편을 예고한 조(북)러 특사외교'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사태진전"이라고 강조함.
- 이어 조선신보는 최룡해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 대해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미국이 더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조·러 공조체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도에 대한 조선 측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과의 결전에서 핵무력 발휘할 것"(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의 인권 공세는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조작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또 신문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인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함.

■ 북한 매체 '김정은 암살' 영화 비난... "극악한 도발"(11/28, 우리민족끼리)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 '인터뷰' 개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이 영화를 미국의 '극악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징벌'을 '우리민족끼리'가 28일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완전한 현실 왜곡과 괴이한 상상으로 꾸며진 모략영화 상영 높음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도발행위이며 정의로운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일본 비난... "징벌 못 면해"(1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감히 훼손시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 체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작당한 것으로 하여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위협함.
 - 통신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에 편승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통과시키는 데서 한몫 했다"며 "일본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초강경 성전의 기본대상으로 낙인됐으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노릇에 말려들게 됐다"고 지적함.
 - 이어 통신은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며 "일본이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우리의 참다운 인권을 걸고드는 그 꼬락서니는 역겨운 구토를 자아낸다"고 비난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반발하며 '반미사상 무장' 독려"(11/29,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9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사설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인 군사·정치·경제적 봉쇄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반공화국 책동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 강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5면 '반역패당의 대결야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등의 논평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노골적인 '비방 중상행위'라고 비난했다.
 - 6면 '조선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등의 논평에서는 주한미군 성범죄를 지적하며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함.

- 북한,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자동 개입 비난(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일본에 파국적 운명을 강요하는 상전의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주일미군의 자동개입 입장을 발표한 속내는 '북침'과 '제2의 조선전쟁'에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야망을 버젓이 드러내며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쟁도발에는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전면초토화로 대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임.
 -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각오하고 있으며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될 것이며 머지않아 현실로 증명될 것"이라고 논평은 경고함.
 - 노동신문은 '악의 화신 미국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글을 통해서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침을 단행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 책동"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인종차별 시위 미국은 인권 유린의 표본국"(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확대는 "극심한 인종차별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인권불모지로서 미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 유린의 표본국으로서 제 주제도 모르고 자기의 찌그려진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재보려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강조함.

- 북한 인권연구단체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품"(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상보'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나오게 된 흑막을 발가놓으로써 그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고 설명함.
 -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EU를 "미국의 삽살개", "숨이 꺼진 EU의 독자성" 등의 표현으로 폄하하고 유엔을 향해 "미국의 강권과 전횡, 달러 주머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주장함.
 - 상보는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온갖 인권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이 주인 된 세상, 인민의 참다운 인권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러시아와 해방 70주년 공동행사 대표단 교류"(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이 해방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대표단 교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경제 무역과 인도주의, 국제무대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함.

- 특히 "쌍방은 조국해방 70돌과 러시아의 조국전쟁승리 70돌이 되는 다음 해에 공동의 경축 행사들을 성대히 조직하며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왕래와 협조를 활발히 진행해나갈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소개함.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비난 대규모 군중대회(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을 "과렴치한 정치적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를 도용해 벌여놓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국권을 해치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행사에는 김기남·김평해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 장병, 공장·기업소·농장·대학의 일꾼, 근로자, 학생들이 참석함.
-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방북 여전히 검토 중"(11/26,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안치크 대변인이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EU 인권특별대표가 북한으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직 북한이 방북 초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적십자, 북한 이산가족 서신교환사업 중단상태(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북한의 가족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서신을 전달해온 미국 적십자사가 지난해 초부터 서신 교환 사업을 중단했고, 미국 적십자 측이 서신 전달을 중단한 이유가 북한 적십자사와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RFA는 미국 적십자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지역 가족재회사업을 담당한 리사 갈리가 "적십자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를 상대로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간단한 인사만 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규탄대회 지방으로 확산(11/26, 조선중앙통신)
 -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북한의 군중집회가 평양에 이어 지방에서도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26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평안남도, 함경남도 군민대회가 26일에 진행됐다"고 밝힘.
 - 군민대회에서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초강경 대응전'을 선포한 지난 23일의 국방위원회 성명이 낭독됐으며, 군인, 노동자, 학생 대표들이 연설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군중의 '시위 행진'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프랑스, '핵 위협' 북한에 경고... "추가제재 부를 뿐"(11/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보도에서 프랑스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실험 위협을 계속할 경우 유엔의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함.
 - 필립 베르트 프랑스 정치 자문관은 24일 핵 비확산을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오바마 美 대통령이 호주의 대학에서 한 연설(11.15, 지금은 역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을 거론하며 "파멸을 앞둔 자들의 궁상스러운 비명"이라며 '미국은 지금 자기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11.25, 중앙통신)
- 美 사법부가 특수 장치를 탑재한 비행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에 대해 '미국에 의해 개별적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까지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특등 인권유린 범죄국, 인권 교살국'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핵무기 전력운용 시스템개선 계획'에 대해 미국의 '비핵세계' 구상은 "핵군축이 아니라 핵 현대화 계획"이라며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 강조(11.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박근광 黨 부부장), 11월 24일 말레이시아 수상과 담화(11.2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한반도 유사시 駐日美軍 자동개입' 입장 발표 관련 '침략야망을 빼앗기 드러내며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전쟁도발에는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전면 초토화로 대담하겠다'고 강조(11.3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박봉주(총리), 바베이도즈 수상에게 자국 독립 48돌 즈음 축전(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이디오피아 北韓대사 김혁철, 11월 25일 同國 대통령 작별 방문(11.30, 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6·25 미군만행 고발' 신천박물관 방문(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표적인 반미교양 시설인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천박물관 방문 이유에 대해 "구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천만 군민을 반미 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박물관 방문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박명철이 동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미국 원색 비난…'인권공세' 분노 표출(11/2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 등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4·26만화영화촬영소 방문(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26만화영화촬영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제1비서는 "민족제일주의, 집단주의, 계급교양 등에 이바지하고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키워주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김 제1비서의 시찰에는 김기남 당 비서와 리재일 제1부부장, 김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김의순 부부장이 동행함.

- "김정은, 독립채산제 확대 새 경제대책 지시"(11/27,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30 조치'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개선대책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30 조치는 공장, 기업, 농업부문의 생산·분배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적 향상을 겨냥한 것으로,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공장 등의 현장에 하달돼 실행을 위한 세칙까지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비행훈련 참관(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 추격기 비행사(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라며 김 제1위원장이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인 조금향·림설의 이착륙 단독비행훈련 모습을 보고 '불사조'라고 치하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날 비행훈련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노동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최룡해 방러 마무리...“내년초 정상회담 할 듯”(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17일(러시아 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2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고, 이어 21일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그는 24일 북한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최룡해, 연해주서 경제협력 논의...방러 마지막(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방러 마지막 날인 24일(현지시간)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와 회담했다고 전함.
 - 뉴스는 최 비서가 회담에서 "연해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 전략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러) 협력을 위해서도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양측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음을 전함.

- 북한 '빨치산혈통' 띄우기...최룡해·오일정 역할 주목(11/24: 2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24일 저녁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을 모델로 한 예술영화 '백옥' 1부를 방영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 영화의 첫 공개 당시 "영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했던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를 원형으로 하여 혁명의 영도자를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모신 전사의 투철하고 진실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공군지휘부에 김일성 부자 동상 설립(11/29, 조선중앙TV)
 - 북한이 29일 항공절을 맞아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웠다고 조선중앙TV가 밝힘.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9일 제막사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단 한대의 적기가 얼씬하지 못하게 강철같은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지금까지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설치된 기관은 인민무력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가과학원, 보위대학 등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최룡해(김정은 특사)와 일행, 11월 24일 러시아 일정 마치고 귀환(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강계목재가공공장·강계연필공장 현지 요해 및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기지 조성 등 협의회 진행 및 생산공정 현대화' 독려(1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정영원 「청년동맹」 부위원장), 11월 26일 러시아 방문차 출발(1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유훈 관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고 있는 과학적·백과전서적인 지침이며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 나가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역세게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방위 성명' 지지 양강도 군민대회, 현지에서 진행(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노동인구 감소 대비해 노동력 질 제고 추진"(11/27, 미국의소리)
 - 북한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교육 개선을 통해 노동력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 교육위원회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2040년 북한의 0~14세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보고서는 교육을 개선해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다. 경제 상황

- "자연에너지 내세웠던 北, 전력난에 화력발전소 증설"(1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보도를 통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25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양과 가까운 평안남도 강동 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멜빈 연구원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100~300MW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화력발전소 중 규모가 가장 큰 북창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 1천600MW의 약 20% 정도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멜빈 연구원은 북한에 북창발전소를 비롯해 주요 화력발전소 8곳이 있고 이들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약 2천770MW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선봉화력발전소와 12월화력발전소 두 곳은 가동 중단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황해북도 예성강에 '청년4호발전소' 준공(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 황해북도에 건설한 '예성강청년4호발전소' 준공식이 27일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예성강에 발전소를 건설해 황해북도 지역의 긴장한(부족한)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관철에서 또 하나의 성과가 이룩됐다"며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됐다"고 밝힘.
 - 준공식에는 동정호 건설건설공업상, 박태덕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물고기잡이' 독려...북한 수산자원 고갈 우려(7/15,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11/30,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4년 제3호(7월15일 발행)에 실린 '현시기 해양자원 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함.
 - 논문은 "수산자원 증식량과 어획량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이런 조건을 지어주지 않고 알낱이 시기(산란기) 엄지고기(알을 낳을 수 있게 다 자란 물고기)를 다 잡거나 새끼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내기만 한다면 얼마 안가서 수산자원이 고갈되게 된다"고 우려함.

라. 대외 경제관계

- 말레이 "사고 탄광에 북한인 46명 취업...합법 고용"(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를 통해, 말레이시아 언론이 내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지난 22일 보르네오 섬 사라와크 탄광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광부 119명 가운데 북한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보도했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완 주나이다 말레이시아 내무차관은 북한 광부들이 사라와크 주와 북한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현지 탄광에서 일하게 됐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진출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설명함.

- 북한 "내륙철도, 북러경협 본보기...물류거점 될 것"(11/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내각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의 김철호 부국장이 "우리는 이번 철도개건사업(내륙철도 현대화사업)을 조로 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의 본보기로 잘 이끌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이어 김 부국장이 북러 합작으로 마무리한 나진-하산 철도와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사업을 언급하고 "철도개건사업 또한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인 것과 함께 전망적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물자 중계수송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을 조선신보는 전함.
 - 또한 김 부국장은 내륙철도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인 채동역(평안남도 은산)~강동역(평양)~남포역(남포)의 175km 구간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평양역~순천역(평안남도 순천)~고원역(함경남도 고원)의 230km 구간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조선신보는 전함.

-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 농·축산업 진출 박차(11/26, 연합뉴스)
 - 연해주 주정부에 따르면 고명희 북한 농업부 부부장이 26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연해주 주정부 농업국 국장 안드레이 브론츠와 농업, 축산 분야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는 26일 보도를 통해 전함.
 - 고 부부장은 26일 연해주에서 온실을 이용한 채소 생산과 양돈 등의 사업을 벌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연해주 정부 측에 임대 가능한 농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찰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음을 뉴스는 전함.
 - 이에 브론츠 국장은 러시아 및 중국 농업 기업들이 연해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하는 사례들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러시아의 대형 농업·식품 기업인 '루스아그로'도 연해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를 전함.

- "동해 북일 중간선 부근에 북한어선 급증"(11/27, 아사히신문)
 - 아사히 신문은 27일 동해의 북일 중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함.

-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동해의 북일 중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400척가량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함.

■ 중국 엔벤 여행사, 북한관광 중단에 백두산서 활로 모색(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외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관광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중국 지린성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여행사들이 백두산 관광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함.
- 엔벤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 북한 측에서 언제쯤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대안으로 백두산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뉴스는 전함.
- 이어 뉴스는 엔벤지역 관광업체가 백두산 관광업체인 창바이산(長白山)관광과 손잡고 지난 15일부터 엔벤주 주도 엔지(延吉)에서 매일 출발해 당일 도착하는 백두산 관광 직행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백두산을 관리하는 지방정부도 지린성 주민에게 내년 4월까지 백두산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나섰음을 전함.

-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 해당 나라와 민족의 국력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며 '오늘의 천리마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과 김일성·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11.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전국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11월 25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황해북도 은파광산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평양건축종합대학, 김정은 대학 현지도 및 명예총장 추대 1주년 기념 교육과학성과전시회 진행(11.25,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나무모 생산성과(올해 연간생산계획 120% 수행) 선전(11.25,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제1차 '즐기세포의학과학도론회' 개최(11.26, 중앙통신)
- 주종선(건설건재공업성 돌세척수복연구 소장), 새로 개발한 녹제거 및 녹방지용칠감의 "이용가치(종래 칠감의 제한성 극복 등)와 경제적 의의(칠감 소비량 절감 및 수명 연장 등)" 소개 선전(11.26, 중앙통신)
- 하나전자합영회사, DVD녹화기와 DVD화면노래반주기 등 각종 전자음향제품들 생산투쟁에 주력(11.27, 중앙방송)
- 北 국가과학원, 금도금지 레이저인쇄기술 개발 선전(11.27, 중앙통신)
- 평양시여단과 물길건설기계화 사업소, 황해남도 물길굴 공사에 주력(11.2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김정은 평양건축종합대 방문 1주년 '띠우기'(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건축종합대학 방문 1주년을 맞아 이 대학을 부각함.
 - 신문은 이 대학이 지난 1년간 위성과학자주택단지를 비롯한 200여 건의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하고 다양한 첨단실험설비를 연구·제작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김 제1위원장의 '덕분'이라고 주장함.

- "최근 10년간 북한 재해 및 사고 사망자 1천400여명"(11/27,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최소 1천400여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재난 관련 연구소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610명이 목숨을 잃었던 2007년 홍수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가 가장 많았다고 방송은 전함.
 - 재난역학연구소는 북한에서 유독 홍수 피해가 많은 이유가 1990년대 이후 농지 확장을 위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즉시 나무를 심어야 할 민둥산이 북한 전체 토지의 11%가 넘는다고 설명했음을 방송은 전함.

-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이 신청한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을 등재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함.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 벽화, 황해남도 봉천군 루천리·강령군 금동리에 설치(11.25, 중앙통신)
- 국방위 성명(11.23)지시 「청년전위들과 직맹일꾼들 및 직맹원들의 결의대회」, 11월 27일 청년공원야외극장과 전승혁명사적지에서 진행(11.27, 중앙통신·평양방송)
- 전국 과수부문 전시 및 발표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1.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전국 경락학술토론회, 11월 26일과 27일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고려의학과학원에서 진행(11.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대북정책 특별대표 내주 방한…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조율 (11/28, 연합뉴스)
 -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가 북핵과 북한 문제 협의차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김 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달 6일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한국과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로 지명된 이후 처음임.
 - 한미 양국은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파악된 최 특사의 방러 결과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토대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과 대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남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에 취할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리된 이후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짐.

나. 미·북 관계

- 북한 김정은, 미국 원색 비난…'인권공세' 분노 표출 (11/2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원색적인 분노를 표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했으며 북한 공식 매체의 미국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임.
 - 김 제1위원장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 등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으며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을 비난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반미'의 기치를 선명히 내걸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김 제1위원장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복수결의 모임'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미 교양'을 독려하기도 했으며 이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을 계기로 조성되는 듯했던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가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됨.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동해 북일 중간선 부근에 북한어선 급증" <아사히> (11/27, 연합뉴스)
 - 아사히 신문은 27일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 자료를 근거로 동해의 북일 중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400척가량 확인되었으며 2011년 15척, 2012년 80척, 작년 110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음.
 - 현재 북한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의 근거되는 국제해양법 조약 미가입국이며 또한 동해에서 경제수역을 공포하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사이에 별도의 어업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았음.
 - 이 같은 현상은 북중관계가 삐걱대고, 외부의 식량지원도 예년만 못하자 북한이 바다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일본 당국의 분석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음.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일본 비난... "징벌 못 면해" (11/28, 연합뉴스)
 - 일본과 대화를 진행 중인 북한이 28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북한 압박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거칠게 비난하고 참혹한 대가는 오직 험악한 사태를 조장시킨 자들이 저야 한다며 보복을 다짐해 주목됨.
 - 일본은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지난 18일 결의안이 압도적 표결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음.

-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일 비난은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측의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마. 러·북 관계

- 북한 "러시아와 해방 70주년 공동행사 대표단 교류" (11/25, 연합뉴스)
 - 지난 17~24일 김정은 제1위원장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해방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대표단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비서 일행은 러시아에서 군사 관련 시설을 여러 곳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특히 러시아 동부군 5군 지휘부와 태평양함대 군사역사박물관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최 비서와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지난 19일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밀월 분위기는 내년에도 군사, 경제 등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 농·축산업 진출 박차 (11/26,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대규모로 임차해 농사를 지은 뒤 생산물을 러시아측과 분배하는 농업 협력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 북한 고위 인사들이 극동 연해주,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등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데 이어 실무급 담당자들이 현지를 찾아 구체적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음.
 - 연해주 주정부에 따르면 고명희 북한 농업부 부부장이 26일 극동 블라디보스토 크를 찾아 연해주 주정부 농업국 국장 안드레이 브론츠와 농업, 축산 분야 협력 사업을 논의했음.

- 농업 실무 담당인 고 부부장의 현지 시찰은 리수용 외무상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농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논의한 뒤 이루어진 것임.
- "북한, 러시아 핵연구소에 연구자 파견"<산케이> (11/30,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의 드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JINR)에 연구자를 파견, 핵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1956년 JINR에 가맹한 이후 매년 핵물리학자 등을 파견했다. 올 1월에는 북한 연구자 6명이 방사성물질 '핵전환'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해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됐음.
 - 지난 3월에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JINR 전체회의에 북한 외교관이 참석했으며, 현재도 JINR의 하부조직인 플레로프 핵반응연구소(FLNR) 등에서 북한 연구자가 활동 중이며 JINR은 1956년 당시 소련이 구 공산권 국가들의 원자력 연구를 위해 모스크바 북쪽 드브나시에 개설한 연구소로 현재도 북한, 몽골, 쿠바 등 18개 회원국이 핵기술 등을 공동 연구하고 있음.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핵기술 훈련, 원조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북한 연구자의 JINR 파견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산케이는 지적했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한·중 관계

- 주한중국대사 "사드배치 반대...한중관계 나쁜영향" (11/26,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추 대사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거리가 2천km 가량일텐데, 이는 북한 미사일의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이 아닌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드 미사일 도입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중국의 안전시스템에 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면서 "중국은 모두가 받아들일 재개조건을 만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6자회담 재개는 미국과 남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 중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정상 독려뒤 첫 軍위안부 협의...큰진전 없어 (11/27, 연합뉴스)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군 위안부 문제와 양국 현안을 협의했으며 우리측은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이에 기초해 의견 교환을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 우리 측은 또 "(이른바 요시다 증언과 관련한) 아사히 신문 오보 인정 이후에 일본 내에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스스로의 공언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으며 일본 측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서도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는 '협의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본질상(일본이) 성의 있는 것을 갖고 왔다 안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 한국, 일본에 문화재 반환 협력기구 창설 제안 (11/29, 연합뉴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이날 일본 요코하마 베이 호텔에서 열린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의 한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일본내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기구 창설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회담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김 장관은 "일본 측은 쓰시마 사찰과 신사가 한국인에 의해 도난당한 불상에 대해 언급했고, 우리 쪽에서는 그 문제 뿐 아니라 일본 측이 한국에서 불법 반출해간 문화재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문제를 협의할 양국 공동의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이어 "해외의 한국 문화재 중 43%에 달하는 6만7천점 이상이 일본에 있는 만큼 그것의 목록과 취득 경위 등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라. 한·러 관계

■ 황준국 내주 러시아 방문... '최룡해 방러' 후속 협의 (11/27, 연합뉴스)

- 대한민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달 1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으며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는 북한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이뤄진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 결과와 관련된 논의와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등 북러간 관계 발전 상황에 대한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 고위소식통은 "현재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러시아도 우리와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러시아 측에 이 입장을 다시 설명할 것으로 관측됨.

■ 러 극동개발장관 "한반도 경험 많을수록 안정화 기여" (11/28,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시범 운송이 시작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 "한반도에서 공동의 프로젝트와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경제협력이 많아질수록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갈루슈카 장관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가 복구됐고 시범 석탄 수송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로 남·북·러 간의 공동 노력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성과가 훨씬 더 많고 잠재력이 거대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류 장관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러 간에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발전해 남·북·러 간에 더 많은 사업이 이뤄짐으로써 동북아의 좋은 번영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 미·중 관계

■ 중국, '인공섬 건설 중단' 미국 요구 일축 (11/2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위치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섬(중국명 용수자오, 베트남명 다쯔텝)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라는 미국 군당국자의 발언에 "누구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음.
- 화 대변인은 중국의 산호초섬에 대한 건설 활동은 섬 위에서 활동하는 인원의 작업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수색구조 등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나는 그 어떤 외부(세력)도 중국의 이런 활동에 이러쿵저러쿵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외신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제프리 풀 중령은 최근 중국이 대규모 매립공사를 진행 중인 피어리 크로스에 비행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밝히고 공사중단을 촉구했으며 화 대변인은 비행장 건설 관련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음.

바. 미·일 관계

- "일본, 미·호 합동군사훈련에 첫 동참" (11/25, 연합뉴스)
 - 일본은 내년에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탈리즈먼 세이버'(Talisman Sabre) 미·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호주 언론이 25일 보도했음.
 - 2005년부터 시작된 탈리즈먼 세이버 군사훈련은 2년마다 6~7월경에 개최되며 미·호 연합군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며 일본은 내년 '탈리즈먼 세이버' 훈련에 약 30명의 장병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탈리즈먼 세이버' 훈련에서는 특히 약 3만 명의 미·호 연합군과 함께 헬리콥터와 전투기, 호버크래프트, 낙하산 부대 등이 동원돼 적이 점령한 섬을 탈환하는 가상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 일본, 헤이글 사임으로 '미일방위지침 개정' 차질 우려 (11/25,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사임 소식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일간에 협의중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헤이글이 전통적으로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 출신 각료로서,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그에 입각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은 공화당 출신이기에 의회에서 공화당 공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헤이글이 물러남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 공화당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음.

사. 미·러 관계

- 美사령관 "미군 내년까지 발트3국·폴란드 주둔" (11/24, 연합뉴스)
 - 벤 호지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는 이곳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에 미군이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내년 말까지의 교대 근무 계획을 수립했고, 업무 수행을 담당할 부대도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자 이들 4개국에 총 6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도 군사훈련 명목으로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공군력도 증강했음.
 - 호지스 사령관은 러시아가 잦은 군사훈련과 영공 침범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나토는 동맹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 시점에서 사소한 사건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태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려면 동맹국들의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푸틴 "러시아와 제재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 용납 못해" (11/29,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취한 러시아 제재는 불법이며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와 최후통첩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전망이 없으며 이 같은 압박은 (관련국들에) 직접적 경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도 위협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 푸틴은 이어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포함한 국제 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주요 서방 기업들은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이 우위를 점해 제재와 협박의 악순환적 논리를 극복하고 누적된 문제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 중·일 관계

- "중국해경선 일주일째 센카쿠 주변 순찰" <환구시보> (11/27, 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해에 진입했다고 중국언론 환구망이 일본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일본해상보안청은 전날 발표에서 3척의 중국 해경선이 26일 센카쿠 12해리(영해)에 진입했으며 지금까지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주변 해역 순찰은 일주일째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의 순시선이 센카쿠 근해에 접근하는 중국 해경선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중국어와 일본어로 "(다오위다오는) 자고이래로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응수했다고 일본해상보안청 측은 전했다.
 - 센카쿠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 해경선의 순찰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것은 중국정부가 최근 또다시 센카쿠 영유권 강화 행보에 나섰다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며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국가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군대의 결심과 의지는 강력하고 확고부동하다"며 일본에 경고를 보냈음.

자. 중·러 관계

- "러시아, 중국과 첨단 방공미사일 S-400 수출 계약" (11/27, 연합뉴스)
 - 러시아 유력 일간 베도모스티는 26일(현지시간) 자국 방산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트'와 중국 국방부가 지난 9월께 최소 6개 대대 무장 분량의 S-400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며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지만 러시아 당국은 아직 미사일 수출 계약에 대해 공식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S-400 매매 협상을 벌여왔으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S-300 미사일을 대량 구매해온 중국은 이보다 앞선 무기인 S-400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대공 방어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첨단 미사일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S-400의 외국 수출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대(對)서방 연대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사일 수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며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는 중러 밀월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될 것임.

- 중국 "중러 협력 강화하지만 군사동맹은 안 맺는다" (11/27,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서로 맞서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러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은 '동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은) 중러관계를 부단히 발전하게 하는 생명력과 활력"이며 "중국은 군사집단(군사동맹)을 만들거나 이를 확대하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하며 세계를 세력 범위와 대립 진영으로 나누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중러 양국은 근년 들어 "역사상 최고의 관계"라고 자평할 정도로 정치, 군사·안보, 경제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해군 합동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절차에 합의하고 내년 봄 지중해와 태평양에서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일부 외신이 보도했음.
- "러시아, 중국에 '중국판 Su-35 전투기' 수출키로" (11/28, 연합뉴스)
 -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게 될 러시아제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 계약과 관련해 이미 중국이 요구하는 전투기 개조를 허락했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했음.
 - 수호이사(社) 부사장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선 오리지널판 Su-35 한 대를 중국에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수출하는) Su-35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며 중국 측은 Su-35에 중국산 무기를 재장착하고 전투기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중국어 환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양국 간에 수년째 이어지는 Su-35 구매계약 협상은 이르면 내달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중국은 우선 24대의 Su-35를 구매해 자체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쟈(殲)-20(J-20)이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울 방침임.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국방위 성명에 주민 동원 '강경대응' 분위기(11/24,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5면 거의 전체를 할애해 대남위협 논평과 남한이 '인권불모지'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로 도배했음.
 - 신문은 '인권 모략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통과를 환영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뽀"이라고 위협했음.
 -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부터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결을 고취하는 언동만 일삼으면서 끝내 북남고위급접촉의 가까운 기회를 또다시 망쳐놓았다"고 주장했다.
 - 6면에서는 "국방위 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쉬버릴 보복 열기로 가슴 끓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했으며, 기사에서 주민들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뿐 아니라 EU와 일본, 남한을 모두 비난하며 '복수'와 '징벌'을 다짐했음.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은 인권 정치화...위험한 전례"(11/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내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의 제도전복에 악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음.
 - 논평은 특히 미국이 1980년대 파나마 등을 침략할 때 인권 문제를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목인된다면 정치적 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민화협 "남 '인권결의' 기담...극악한 정치도발"(11/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음.

- 민화협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며 "그러나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 인간쓰레기(탈북자 지칭)들의 뼈라 살포 망동에 대한 비호·조장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남한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외 송출 북한근로자 인권 침해 심각"(11/24, 미국의 소리)
-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스티븐센터에서 21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은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전 세계 16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허덕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이들 근로자는 보통 3년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최고 16시간에 달하며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하나, 북한 당국에 '충성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손에 짚 수 있는 임금은 월평균 120달러 정도에 불과함.
 - 여기에 더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아래 작업 현장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건 꿈도 꿀 수 없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송환하겠다는 협박을 끊임없이 받게됨.
 -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운반하기 때문에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력 송출 문제를 대북제재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동유럽의 경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했지만 폴란드가 여전히 수입하고 있고, 쿠바의 경우도 자료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어느 나라에 파견되고 있는지 대부분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북제재와 연계시키는 것은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 '북한, 현대판 노예인구 10만 8,200명'(11/24, 미국의 소리)
 - 호주의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를 한 결과를 담은 '2014 국제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만 8,200명이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 상태에 놓여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 워크프리 재단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에 대한 매매와 노동착취 등 노예계약에 의하지 않았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상태를 현대판 노예로 규정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감자들이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보고서는 모든 조사 대상국들이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현대판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보았음.
-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비난 대규모 군중대회(11/25, 연합뉴스)
 -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반발하는 북한이 25일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비난 수위를 높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한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중앙TV도 군민대회를 녹화중계로 내보냈음.
 -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을 "과립치한 정치적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를 도용해 벌여놓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국권을 해치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 행사에는 김기남·김평해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 장병, 공장·기업소·농장·대학의 일꾼, 근로자,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로 볼 때 10만여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보임.

- 북한 김정은, 미국 원색 비난…'인권공세' 분노 표출(11/2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원색적인 분노를 표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제1위원장의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그가 미국을 비난한 발언들을 그대로 소개했는데,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 등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음.
 - 북한 공식 매체의 미국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임.

- 북, 말레이 광산 폭발 현지 외교관 파견(11/2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22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라와크주의 스리아만 인근 판투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북한인 광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가운데 북한 대사관은 외교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뒃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갱도에 설치돼 있던 환풍기에서 누전으로 인한 전기불꽃이 발생하면서 지하 69미터 갱도에 차 있던 가스가 순식간에 폭발했는데, 당시 갱도에서 석탄 채굴작업을 벌이던 외국인 광부는 북한 사람을 포함해 인도네시아(8명), 미얀마(6명), 중국(6명), 방글라데시(2명) 출신 등 모두 33명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북한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외교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망자와 부상자 처리 문제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 특히 사고가 난 탄광에 전체 외국인 광부 119명 중 46명을 파견한 북한은 사고 직후부터 대사관 직원을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음.
 -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인 사망자 처리와 부상자 치료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에 전권을 위임했고 이 외교관은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 수술 결과를 설명들은 가운데, 부상자 가운데에는 온 몸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말레이 북노동자 탄광 사고 시설불량 탓(11/26,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주 북한인 등 3 명의 외국인 광부가 사망한 말레이시아 탄광 폭발사고 당시 갱도 내 비상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1차 사고조사 결과 드러났음.
 -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연구소는 1차 사고조사 결과 불량 환풍기에서 생긴 전기불꽃이 갱도 안에 가득 차 있던 메탄가스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같은 잠정 결과에 따라 탄광 내에 설치된 메탄가스 농도 측정기와 환풍기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북한 "미국과의 결전에서 핵무력 발휘할 것"(11/26,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의 인권 공세는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26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또다시 '핵'을 언급했음.
 - 신문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부패한 인권형편을 위장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주장했음.
 - 북한은 이어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음.
 - 노동신문 26일 자는 '질식된 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힌 인권'이라는 글을 통해 '유신 독재'와 세월호 참사 등을 이유로 남한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당장 재판정에 나서야 할 범죄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주장했음.

-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 "대가 치를 것"(11/26,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논평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4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한이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음.

- 통신은 이어 남한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 동참했다며 "괴뢰 패당의 인권 소동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합세해 신성한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압살하려는 동족대결의 최극한점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이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음.
 - 통신은 "괴뢰 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별없이 미쳐 날뛰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유엔 인권결의 규탄대회 지방으로 확산(11/26,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북한의 군중집회가 평양에 이어 지방에서도 개최됐다고 26일 보도했으나, 군민대회가 개최된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음.
 - 대회에서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초강경 대응전'을 선포한 지난 23일의 국방위원회 성명이 낭독됐으며 군인, 노동자, 학생 대표들이 연설했다고 하며,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군중의 '시위 행진'이 진행됐음.
- "북, 세계 최악의 강제 노동국"(11/26,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기업자문회사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의 사라 케리건(Sarah Kerrigan) 선임 분석관은 26일 북한은 이 회사가 2008년부터 조사한 강제적 비자발적 노동으로 인한 위기 지수가 7년 연속 세계 최악의 나라라고 밝혔음.
 - 이 회사가 전 세계 197개국을 대상으로 위기가 없는 나라를 10, 가장 위기가 심한 나라를 1로 표시한 지수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1이하의 극심한 위기국으로 기업들이 노동력 이용을 피해야 할 1순위 국가라는 설명임.
 - 케리건 분석관은 북한이 카타르, 러시아 등과 직접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사소한 위반에도 구타나 감옥에 수감하는 등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음.
 -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을 돕게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이들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을 국제법 기준에 맞게 보장해 주고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북, 주민동원 '반미열기' 고조...군중대회 지방까지(11/27,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 소동을 전면 배격하는 분노의 목소리'라는 부제목이 달린 6면 코너에 노동자, 농민, 학생, 체육인 등이 미국을 비난한 글을 게재했으며, 이들 중에는 북한 역도의 간판 엄운철도 포함됐음.
 - 엄운철은 "우리의 신성하고 존엄 높은 인권을 감히 거론한 미제와 일본, 박근혜 폐당들은 물론 그놈들에게 아부굴종하며 거수기 노릇을 한 추종세력들을 통째로 들어 지구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싶다"며 분노를 표출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5면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황해남도 신천군 일대에서 민간인 3만5천여 명을 살해했다며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시를 실었음.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일본 비난..."징벌 못 면해"(11/28,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28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을 거칠게 비난하고 보복을 다짐했음.
 - 중앙통신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에 편승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통과시키는 데서 한몫 했다"며 "일본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초강경 성전의 기본대상으로 낙인됐으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노릇에 말려들게 됐다"고 지적했음.
 - 중앙통신은 "참혹한 대가는 오직 험악한 사태를 조장시킨 자들이 져야 한다"며 "일본의 정치인들은 제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연구단체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품"(11/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상보'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나오게 된 흑막을 발가놓으로써 그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 상보는 인권분야에서 북한의 국제적 협력 노력, 유엔 인권결의안의 '허위성', 유럽연합(EU) 및 유엔 비판 등의 순으로 구성됐음.

- 상보는 북한이 그동안 인권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대화를 해왔으며 1990년대 부터 국제고문반대협회 대표단 등 외부인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과 지난 10월 EU 인권특별대표의 초청 등을 그 근거로 들었음.
 -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영된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 자료들을 모아놓았다"고 비난함.
 -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EU를 "미국의 삽살개", "숨이 꺼진 EU의 독자성" 등의 표현으로 폄하하고 유엔을 향해 "미국의 강권과 전횡, 달러 주머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음.
- 북한 "인종차별 시위 미국은 인권 유린의 표본국"(11/2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거론하며 미국을 '인권 유린의 표본국'이라고 비난했음.
 - 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미국은 법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니, 사법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 놓았다"고 비난했음.
 - 이어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를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법으로 정당화하려고 떠드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인권기준 자체가 찌그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미국이 인권 유린의 표본국으로서 제 주제도 모르고 자기의 찌그러진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채보려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유엔 인권결의 반발하며 '반미사상 무장' 독려(11/29,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며 주민들의 '반미사상 무장'을 거듭 독려했음.
 - 사설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인 군사·정치·경제적 봉쇄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반공화국 책동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 강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유엔 북한인권결의 과정에 참여한 미국·일본·한국을 '주된 적'으로 규정하면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적들에 대한 서슬퍼런 증오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하며 당·근로단체와 사상교육 강사들이 꾸준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반미사상 교육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음.

- 5면 '반역패당의 대결야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등의 논평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노골적인 '비방 중상행위'라고 비난함.
- 6면 '조선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등의 논평에서는 주한미군 성범죄를 지적하며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음.

2. 북한 인권

- 외통위, 북한인권법안 법안소위 회부...연내처리 주목(11/24,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음.
 -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음.
 - 지금까지 북한인권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모두 19건이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음.
 - 하지만 이번의 경우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전보다 더 강화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우리 국회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해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심의가 이뤄져 연내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법안심사소위의 북한인권법안 심사에서는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문희상 "압박만으론 北 핵·인권문제 해결 도움안돼"(11/24,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북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돼야 (북핵 및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들어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무성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 꼭 통과시켜야"(11/24,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북한인권법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지금이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공식적으로 또는 저와의 개인 대화 중 북한인권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또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등 북한인권 관련 10여개 국내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 "북한인권에 역사적 전환점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 중국 "북한인권 갈등, 상호평등으로 해결해야"(11/24,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전쟁 위협 등을 거론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각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기초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소통으로 인권영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한결같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남북관계 발전 없이 북한인권 개선 없어"(11/25,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25일 발간하고, 북한인권은 한반도 차원의 문제로 남북관계 발전 없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북한인권은 북한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전 체제하에 있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대북인권 감시와 비판·대화와 지원·교류와 협력 병행, 자유권·사회권·평화권 개선,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전체제와 분단체제 극복 노력,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이 제시됐다.

- 주한중국대사 "사드배치 반대...한중관계 나쁜영향"(11/26, 연합뉴스)
 -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압력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 EU '인권특별대표 북한 방문 여전히 검토 중'(11/26, 미국의 소리)
 - 유엔연합의 마야 코치안치크 대변인은 24일,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방북 초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뿐 아니라 북한 정부와 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에 대한 초청장이 이미 유럽연합에 전달됐으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은철 서기관은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이 내년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류길재 "북한인권법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간곡히 부탁"(11/26,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 주최 세미나의 축사에서 국회에 금번 정기국회 중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부탁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시 정부는 이에 기초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했음.
 - 류 장관은 "북한인권문제는 만국 보편 가치의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특히 동포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당한 인권 제기에 북 핵위협 부적절"(11/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지난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연일 핵위협을 일삼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이 북한의 고립과 추가제재만 불러올 뿐이란 반응임.
 -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legitimate) 관심에 북한이 핵위협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음.
 - 미국 국무부의 제프 래스키 공보과장도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 포기를 거듭 촉구했으며, 앞서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필립 베르트 프랑스 정치 자문관 역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매맞다못해 비늘삼켜"...탈북자 北인권유린 증언(11/27, 연합뉴스)
 - 새누리당 원유철, 김영우 의원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두 명의 탈북 여성이 증언자로 나섰다.
 - 2013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이모 씨는 교화소에서 뜨개질로 하루 평균 7벌의 옷을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바늘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또한 중국에서 브로커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전하면서도 모든 브로커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한두명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 원유철 의원은 북한인권 상황이 최악임이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을 역설했음.
 - 김영우 의원은 "증언을 들으니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 "北 태도변화에 걸맞은 인권 개선전략 수립해야"(11/27,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를 열고 북한이 최근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전·홍보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맞춰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전술적 대응전략의 변화를 고려해 향후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자 간 인권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효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내 북한인권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범정부적 기구로 개편해 향후 북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은 주무기관은 인권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이어 새누리당의 통합안에 처벌을 전제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한데 대해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국제사회에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교육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뒤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 국민 90% "북한인권 심각"(11/28, 미국의 소리)
- 한국 갤럽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만 19세 이상 한국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 90%가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74%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다'가 16%였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음.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51%로 절반을 넘는 반면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38% 그리고 12%는 의견을 유보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선 정부 개입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7%가 나와 비교적 팽팽했지만 30대 이상 응답자들 사이에선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답변이 50%를 웃돌았음.
 -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층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가운데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답변이 각각 53%, 54%가 나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6%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한 38%를 앞섰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음.
 - 그러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북한인권 단체가 펼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응답자의 62%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며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이라는 응답자는 28%에 그쳤음.

- 한국 갤럽은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밝혔다.

3. 탈북자

- "탈북 여성, 한반도 평화에 구심점 돼야"(11/25, 자유아시아방송)
 - 분쟁 지역 등에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Women4NonViolence in Peace and Conflict Zones)를 창설한 미국 하와이의 벤티시 가와무라 대표는 25일 탈북자의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와무라 대표는 성차별과 성폭력, 인신매매 등에 희생된 탈북 여성들이 수치심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를 신장시키고, 이들이 폐쇄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겪은 인권침해나 중국에 탈출해 직면했던 힘든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상 등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본거주 탈북민 165명...정착 어려움 겪어(11/26, 뉴스스)
 -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165명(일본 정부 추정 200여명)으로, 이들은 재일동포 북송사업(1959~1984년)으로 북한에 거주했다가 탈북한 재일동포와 자손, 그 배우자가 대부분임.
 - 일본 정부는 일본에 연고가 있는 탈북자에 한해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임.
 - 이들은 일본 재류자격 문제(국적문제), 사회적 불안과 불신, 일본사회 기본상식 결핍, 언어와 풍습의 차이, 기본적인 생활고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탈북자 지원 민단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탈북자 지원 민단센터는 일본입국 후 기본생활품 구입 등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1인당 10만 엔(한화 약 1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03명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됐음.

4. 이산가족

- 미 적십자, 이산가족 서신교환 중단(11/2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적십자사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가족을 찾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서신을 교환하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적십자사 본부의 데이비드 멜처 국제사업 국장은 2012년 두 차례 걸쳐 십 여 통의 한인 이산가족의 서신들을 북한에 전한 후 서신 전달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사업 중단의 원인을 북한으로 보낸 편지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시했음.
 - 적십자사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가족재회 사업을 맡고 있는 리사 갈리 씨도 북한 적십자사에 서신 교환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음.

- 미 상원, 마-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발의(11/26, 미국의 소리)
 - 올해 초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음.
 -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국전쟁으로 북한 내 친척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결의안'(S.RES.587)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음.
 -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무부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미국 시민들도 포함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는 미국계 한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친척들 간 상봉을 허락할 것을 촉구했음.
 - 결의안은 미국 적십자사가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의 북한 내 친척들 간 대화통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했음.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류길재 "투명성 담보되면 北에 소규모 비료지원 고려"(11/25,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협력 추진 방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복합농촌단지사업은 농·축산을 함께 개발하는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협력에 있어 모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 북한동향

- 통일연구원의 '샤이오 인권포럼(11.13~14)'·北 인권사무소 설치 결정 등 우리 정부의 '北 인권문제 제기'를 "희세의 광대극·최악의 정치적 도발, 체제통일 망상 실현 음모책동"이라고 비난(11.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 새누리당의 '北 인권법안' 국회 외통투 상정예고 및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들의 통치위기 수습책'이라며 "괴뢰패당의 신뢰요, 대화요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11.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군의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전쟁포로 대상 "인권유린만행(강제역류 등 국제법·전쟁법규를 유린)"을 주장하며 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 및 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1.23, 평양방송·노동신문/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한 극악무도한 만행)
- *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및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는 "저들의 반공화국 압살정책과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라고 주장(11.23, 평양방송/미국의 인권소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 對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에 대한 '국방위 성명(11.23)'에 접한 각계의 '분노와 보복의지'를 표명하는 반향들 소개(11.24, 중앙방송)
 - 직총중앙위 부위원장(김동선), 농근맹 중앙위 부부장(김금철),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고급중학교 교장(최웅성),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학생들 등

- 「민화협」 대변인 담화(11.24), 유엔 對北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南) 정부가 적극 가담했다고 비난하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속 위협(1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날뛴 것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이다.
 - 우리는 괴뢰패당의 인권모략소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운명인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 보려고 발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 * 對北인권결의안 유엔통과를 환영한 것 관련 '신성한 인권을 모독하며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괴뢰역적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징벌하고야 말 것'이라고 거듭 위협(11.24,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모략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對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돌파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것 관련 '미국을 위시로 한 적대세력들은 국제무대에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11.24, 중앙통신/악의 전례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

- 北 국방위 성명(11.23)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 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 11월 25일 김기남·양형섭·김평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南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증상을 하지 않을 데 대한 북남 합의의 난폭한 위반'이라며 '南 당국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진정이라면 채택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습성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11.25, 중앙통신·노동신문/합의파기로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킨 주범)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北 핵실험에 대비해 대비태세 강화)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며 북침핵전쟁도발로 확대하려는 괴뢰 호전광들의 범죄적 계획'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에 미친 군부 깡패의 악담)
- 美 사법부가 특수 장치를 탑재한 비행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에 대해 '미국에 의해 개별적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까지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특등 인권유린 범죄국, 인권 교살국'이라고 비난(11.25,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국방委」 성명(11.23) 지지 및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對北 인권 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기 위한" 평안남도·함경남도 군민대회, 11월 26일 지방당·정권기관 등 일꾼 및 조선인민내무군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1.26,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11.18) 찬성 및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추악한 대결광대극 주역, 체제통일야망 실현의 흥심"이라고 비난하며 '남한 사회를 인권불모지'라고 주장(11.26, 중앙통신·노동신문/질식된 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힌 인권)
- *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미국의 對北 고립압살 책동의 제일선 돌격대로 나서서 인권을 구실로 동족대결을 일층 격화시키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의 일단'이라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11.26, 중앙통신 논평)

- * 우리 정부의 '北인권결의안' 통과 환영 표명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운명에는 안중에도 없고 反北 모략과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매국반역무리'라고 비난(11.26, 평양방송/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도발행위·추악한 대결광신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
-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관련, '미국의 北 인권문제 국제화 및 확대'는 "우리(北)의 제도와 사상을 군사적 힘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방력 강화대책'을 역설(11.2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미국의 인권공세는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
- * 미국 주도 '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전면 거부·배격(北 존엄과 자주권에 도전, 정치적 도발 등) 및 "우리(北)의 對美 초강경대응전은 그대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11.26, 민주조선)
- UN 對北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對北인권법 국회 상정·「전작권」 전환 연기·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괴뢰패당은 온 남조선 땅을 민주주의의 무덤,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지적하고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 '유신독재를 공공연히 미화하고 그의 부활을 위해 앞장에서 날뻐 독재광'이라고 비난(11.27, 중앙방송/극악한 동족대결 광신자 인권유린의 왕초)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은 침략의 서막으로서 뒤에는 전쟁이 따랐다'며 '선전포고를 해 온 이상 적들을 초강경대응으로 짓눌러놓을 결심으로 결의를 조작한 주범들과 가담자들을 타격대상으로 하며 첫째 대상이 미국'이라고 연일 위협(11.27, 중앙통신/제국주의자들의 인권소동은 전쟁의 서막이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